초선들 “개원 초기 이름 알리자” 법안 발의 경쟁 후끈

21대 국회 개원 첫주 195건 접수
새 보좌관·비서관 과열경쟁도 원인
광주지역 의원들 5·18관련법
전남 의원 농촌·해양법안 집중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여야 의원들의 법안발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개원 첫 주인 지난 1일~5일까지 접수된 법률안이 무려 195건에 이를 정도다. 특히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18명 중 13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전체 당선자 300명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의 초선이 의회에 진입하면서 신인들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5·18 관련 8법 공동발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남지역 의원들도 농촌, 해양, 산단 등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제21대 국회 개원 후 접수된 의안은 195건의 법률안 등 총 238건이다. 접수된 법률안에는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 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조치들이 제안됐다. 또,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2건의 법안 등 총 27건의 제정법안도 포함됐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보좌관의 밤샘대기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 제출하는 등 의원들 간 법안 발의 경쟁이 본격화 했다. 때아닌 법안 발의 경쟁은 초선 비율이 높아 개원 초기에 이름을 알리려는 의원실이 많고, 새롭게 포진한 보좌관·비서관들의 과열 경쟁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163명)의 41.7%는 초선이며, 광주·전남지역 초선 비율은 72.2%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처음 단 의원이 8명(44.4%)인 것과 비교할 때 이 지역의 물갈이 폭이 크다. 초선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은 국회의원실의 보좌관·비서관의 변동폭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재선·3선 의원실의 경우 의원실 인력 변동이 적지만 21대 국회에 첫 입성한 국회의원들이 많다 보니, 그 어느때보다 의원실 인력 이동이 컸다. 이 때문에 초선 의원실을 중심으로 새롭게 손발을 맞추게 된 보좌관·비서관들이 국회의원 못지 않게 법안 발의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전두환의 국가장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또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광주 국회의원들도 역할 분담을 통해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의 법안발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지역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9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가 수입보장 보험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3일 대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고,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도 지난 3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이익 공유제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 청와대 전진 배치 ‘주목’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인사팀장 승진
최용선 방위산업담당관 발탁
윤재관 대변인실 부대변인
최치현 사회통합비서관실 행정관
이상현 재외동포 담담관 임명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청와대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이 역량을 인정받아 전진 배치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총무비서관실 재정팀에 근무하던 영암 출신 김영문 행정관(52)이 지난 5월 총무비서관실 인사팀장으로 승진했다. 총무비서관실 인사팀장은 선임행정관급으로, 청와대 행정관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또 목포 출신의 이상현 선임행정관(51)도 지난해 여름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재외동포 담당관에 임명됐다. 그는 그동안 정무비서관실과 자치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등 역량을 인정받았다.

광주 출신의 정재혁 국민생활안전담당관(49)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보좌관으로 수석 3명(하승창, 이용성, 김거성)을 보좌한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국민생활안전담당관으로 발탁됐다.

광주 출신의 윤재관 대변인실 부대변인(48)도 주목받고 있다. 남북정상의 판문점 회담 당시 도보다리 회동을 기획하는 등 정무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조국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핵심보직을 두루 섭렵하다 올해 1월 대변인실 부대변인으로 발탁됐다.

나주 출신의 최용선 국가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44)도 성실함으로 무장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선캠프 안보상황단 팀장을 맡았으며 당시 단장이었던 서훈 국정원장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국가안보실 인수팀으로 입성했다. 이후,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 총무비서관실 인사팀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신설된 선임행정관급인 방위산업담당관으로 발탁됐다.

여기에 사회통합비서관실의 최치현 행정관(47)의 역할도 호평을 받고 있다. 장흥 출신으로 광산구청 민원실장을 지낸 최 행정관은 광주·전남지역 현안과 관련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입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무리없이 조율하고 있다는 평가다.

강기정 정무수석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장성훈 보좌관(51)과 김연명 사회수석을 보좌하는 나원주 보좌관(47)도 지역 현안과 관련,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의전비서관실에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출신 행정관들이 포진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기본소득제 정치권 ‘뜨거운 감자’

김종인 도입 공론화 이어
여야 대권주자들 앞다퉈 의견 피력

‘기본소득제 도입’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기본소득제 논쟁의 불을 붙인 뒤 여야 대권 주자들도 앞다퉈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하고 나서는 등 기본소득제가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다음날에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정치권의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8일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공론화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주신 김종인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사실상 이 지사를 겨냥해 반론을 폈다.

야권에서도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실시되려면 세금의 파격적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며 불가론을 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찬성, 42.8%가 반대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